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세계공정무역의 날 및 대한민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지정 2주년을 기념하는 '인천 2019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UN광장 일원에서 열려 행사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스쿨 미투 조례 만든다 TF 구성하고 올해 안에 발의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스쿨 미투 조례'가 제정된다. 타 시도가 학생인권 조례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에 성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인천은 성인권만을 다루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선희(정·비례)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여성연대, 인천성평등정치네트워크와 공동 주최로 '스쿨 미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집담회에서는 스쿨 미투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례의 취지·목적·내용 등이 논의됐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정 '학교 구성원 인권 조례' 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스쿨 미투 조례에는 성평등 학교 실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성인식개선(성평등)위원회 설치, 국제표준의 포괄적 성교육 실시와 인천시교육청 내 성인권보호관과 같은 전담부서 설치 등이 담길 계획이다.

스쿨 미투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조의원은 "스쿨 미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권만을 집중해서 다루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스쿨 미투 발화자,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조례를 발의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쿨 미투 조례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 한 여고를 시작으로 10곳에서 스쿨 미투가 발생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알 품을 장소 잃은 저어새들 '사라질 위기'

기획
EAAFP 인천 10년, 생태관광 가능성을 엿본다
■ 멸종위기종 번식·서식지 파괴 심각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등지를 뜬 지 꼭 10년째다. 지구상에 2천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90%가 태어나고 자라는 땅이 인천이다. 하나 인천은 웬만한 나라 밖 국제도시라면 필수인 생태공원조차 없다. 생태관광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특하면 '국제도시'라고 떠벌려 왔다. 조건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인천의 자원과 환경은 차고 넘친다. 인천에는 전국의 21%에 달하는 습지와 갯벌(609㎢)이 있다. 본보는 4회에 걸쳐 인천 도심 속 생태관광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2009년 인천 도심 한복판인 남동산업단지 유수지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매립으로 갯벌이 점점 사라지자 저어새가 남동유수지를 피난처 삼은 것으로 분석했다.

남동유수지 내 200㎡ 남짓한 저어새 인공섬에는 매년 약 300마리의 저어새가 찾아왔다. 하지만 가까스로 자리잡은 저어새가 언제 남동유수지를 또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알에서 부화한 어린 저어새의 생존율이 감소해왔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유수지의 저어새 생존율은 2010년 93%에서 2017년 75.7%로 17.3%p 떨어졌다. 2017년 137개 둥지에서 총 272마리가 부화했다. 이 중 살아서 등지를 떠난 저어새는 233마리다.

지난해 저어새 생존율은 더 위태로웠다. 38개 둥지에서 태어난 저어새는 74마리로 2017년에 비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갯벌 매립에 남동유수지 피난처로 작년 생존율 2017년 '4분의 1 수준' 수위 조절 실패 물 찬 인공섬 '원인' 해안공원 등 잇는 생태축 조성 절실

로 감소했다. 자라서 등지를 떠난 저어새 수는 5분의 1로 급감한 46마리다.

원인은 지난해 약 13억 원을 투입해 유수지 내 인공섬(면적 900㎡) 조성이 늦어 진데다가 유수지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기존 인공섬에 물이 찼던 것이다. 저어새를 보호하는 인천시와 홍수를 대비해 수문 조절하는 남동구가 서로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저어새의 계속된 감소는 2011년 송도 11공구 갯벌 매립과도 맞물린다. 저어새의 생존율이 2012년 95%로 정점을 찍다가 송도 11-2공구 호안공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84%로 줄었다. 2014년 83.7%,

2015년 80.2%, 2016년 75%로 꾸준히 떨어졌다. 송도 11공구에 조성하기로 한 대체식지의 규모도 안갯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의 바이오단지 조성계획에 밀리고 있다. 송도 11공구 매립지 바깥 갯벌에 조성하기로 한 '버드 아일랜드'도 슬한 논의 끝에 결국 무산됐다. 2014년부터 추진된 배곧대교 건설도 저어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배곧대교는 왕복 4차로 총연장 1.89km의 도로다. 이는 람사르습지·철새이동경로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관통한다. 저어새 등 철새들에게 송도갯벌은 먹이터다. 저어새를 비롯해 송도갯벌을 찾는 수많은 물새들이 번식지와 서식지를 잃으면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송도~남동산단 유수지~논현 해안공원~소래생태공원을 잇는 생태축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인천 남동산업단지 유수지 인근 공원에서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와 저어새네트워크의 저어새 생일잔치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 300여 명이 저어새를 그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함께 경기도를 바꿔나가요!

'500억' 도민제안에 쏟아!

공모기간 **2019.4.10~5.30**

-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가능 -

공모분야

- ☑ 도정참여형 200억 원
- ☑ 도-시군 연계협력형 A 200억 원
- ☑ 도-시군 연계협력형 B 100억 원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후 내년 예산에 반영

신청방법

-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 ☑ 이메일
 -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A) g-budget@gg.go.kr
 - (도-시군 연계협력형 B) gg0122@gg.go.kr
- ☑ 우편
 -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A) 경기도 예산담당관
 - (도-시군 연계협력형 B) 경기도 민관협력과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갈 길 먼’ 송도 8·9공구 철도 연장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고
5000억 원 사업 경제성 확보 중요
경제청 등 비용 부담 적극 나서야

인천 송도국제도시 8·9공구 철도 연장사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에서 법정노선으로 승인되더라도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데다 누가 재원을 부담할지 결정되지 않아서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신국제역까지 미널 연장 등이 담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1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송도 8·9공구 노선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은 2016년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평가에서 비용 대비 편익(B/O)값이 0.62에 불과해 후보 5순위가 됐다. 땅 주인인 시(인천경제청)나 인

천향만공사(IPA)는 버스노선 신설과 조정 등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 일대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송도 6·8공구의 경우 2020년 말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1호선 연장 및 역사 신설 요청(8공구 M1·M2블록 일원)과 IPA의 골든 하버 개발에 따른 철도 연장 요구가 맞물리면서 시도 노선 신설에 의지를 담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발표했다.

송도 8공구 북측에는 2020년 말까지 약 2만 가구 5만여 명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 철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올해 말 개장하는 신국제역까지의 경우 기존 인천항 제1·2구역 여객터미널의 이용객 80만9천 명(2018년 기준)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5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마련할 경제성 확보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2020년 상반기

까지 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완성하고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과 IPA의 송도 8·9공구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재원 부담 협조가 적극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기본 구상된 송도랜드마크시티역~아암물류2단지(101역)~신국제역까지의 철도 연장 요구가 맞물리면서 2개소의 위치를 주민들의 요구대로 변경하거나 확대할 때 생길 비용 문제나 기간 간 이견 충돌도 상당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IPA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B/C값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토부 승인 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계획 수립, 공사 등 통상 10년 이상 걸리고, 역 위치는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김중국 기자 kjk@kihoilbo.co.kr

법조인들, 검단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갈등에 불지핀다

원주민들 대부분 권리 판매... 계약 무효 가능하다는 소송 권유
현재 법적다툼만 40여 건... '기획영업' 나서도 뾰족한 대책 없어

인천 검단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택지) 전매 과정<본보 5월 16일자 1면 보도>에서 법의 빈틈을 노린 법조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법조인이 부추겨 시작된 소송 결과는 택지를 팔아야 하는 원주민과 매수인 모두에게 실익이 되지 않는다. 20일 검단지역 주민단체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내에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이 4

0여 건 이상 진행됐다. 수분양권은 택지 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분양 권리다. 원주민들은 첫 토지 보상이 이뤄진 2010년부터 수분양권을 팔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인 380명 중 80% 이상이 수분양권을 매수자에게 넘긴 상태다.

문제는 법조인들이 검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미 수분양권을 판 원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토지 보상 직후 저렴한 가격에 넘긴 땅지를 더 비싼 가격에 팔게끔 도와준다며 분양권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7천만 원 수준에서 시작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은 2억 원을 호가하다가 현재 1억5천만 원 수준이다. 법조인들은 수분양권 거래에 대한 모호한 판례를 이용해 무효 소송이 가능하다고 원주민을 설득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 공급 이후의

전매행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전에 이뤄지는 수분양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판례였으나 2017년 공급 전 전매행위를 무효로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서 해석이 분분해졌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일부 원주민들은 변호사 측과 계약을 맺고 무효 소송에 들어갔다. 대부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는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1월 제기된 무효 소송은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 매수인이 3천500만 원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원주민이 처음 판 땅지 가격은 7천500만 원이었다. 다수의 원주민들은 이 같은 소송전이 법조인의 '기획 영업'으로 보고 있다. 통상 합의금액의 30%가량을 소송대리인에 지불한다. 주민들은 법조인이 개입하는 소송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0년 말께 이주자택지가 공급된 이후에는 분양권의 가치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개발된 고양시 향동지구에서는 택지 공급 시점에 무효 소송을 광고하는 현수막이 대량으로 나붙었다. 일명 뒤통방으로 불리는 브로커들

에 의한 피해도 발생해 지금까지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장의 피해를 막을 방안이 시급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주민들은 시의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사인 간 사법적 거래행위에 사업시행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수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부처 의지에 따라 처리 시일은 무기한 길어질 수 있다.
홍봉 기자 spring@kihoilbo.co.kr

허물어지는 삶의 터전 뚜렷한 해법없이 방치

기획
EAAFP 인천 10년, 생태관광 가능성을 엿보다
저어새 보금자리 확보 제자리걸음

송도 11공구 매립 10여 년 지나도
버드 아일랜드 건설 등 대안 무산
습지공원 조성도 문제점 불거져

10년 동안 인천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는 저어새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저어새의 먹이 창고인 송도갯벌은 신도시로 매립돼 점차 사라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송도갯벌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절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일 시와 경제청에 따르면 2006년 마지막 남은 갯벌 송도 11공구(1천245㎡)도 매립되기 시작했다. 당시 환경단체는 저어새 등 습지보호구역을 보전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송도갯벌 6.11㎢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방안을 내었고, 2009년 매립지 내 일부분에 야생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은 10년간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경제청은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등을 최종 변경하면서 송도 11공

구에서 350m가량 떨어진 인근 해안에 버드 아일랜드 건설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역시 섬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갯벌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무산됐다. 경제청은 지난해 7월 송도 11공구에 조성 예정인 완충녹지 4.5km 구간에 폭 30~110m 규모의 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이에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은 송도 조류 대체서식지 및 습지센터 조성 국제 워크숍에서 이를 150~2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녹지 면적이 협소해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기 힘들고, 폭이 좁아 새들의 휴식이 시민들의 친수활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청은 송도 11공구 개발계획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송도 11-2공구의 녹지 면적 일부를 줄여 습지공원 면적에 보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단자유지로 검토 중인 지역과 단독주택 부지를 녹지로 변경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EAAFP는 최근 시에서 남동산단 해안도로 3.2km의 철책을 제거하고 인근 해안친수공간에 조형물과 쉼터, 철새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의 탐조활동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비간섭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60ha에 이르는 홍공습지공원은 방문자가 매년 40만 명에 달하고, 일본 효고현에는 황새 복원을 통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생태 보호와 농촌 재생을 꾀하는 황새마을이 있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



아른으로 가는 길에 '웃음꽃' 성년의날인 20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향교에서 열린 전통성년식 행사에서 강화여고 학생들이 활짝 웃으며 식을 치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ijw@kihoilbo.co.kr

내항 1·8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도전장

인천시가 내항 1·8부두의 속도감 있는 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2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내항 1·8부두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이 초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내항 1·8부두 항만 재생사업은 항만구역 28만6천951㎡와 원도심 주변 지역 16

만6천604㎡를 연계해 해양·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항만 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항만구역 변경 및 해제는 해양수산부가 불특정 시기로 통상 연 1회 시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사업에 약 5천3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 국비·기금(HUG)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

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항만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항만법 절차 간소화 ▶내항 1·8부두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외제 적용을 통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가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대표발의했다. 한편,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다. 내항 시설 이용률은 2005년 92.7%에서 2017년 49.3%로 낮아졌고, 항만 주변 주민들도 소음·분진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기능 재편과 터미널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항만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거점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대한민국의 복지와 경제가 함께 크는 세상

사람과 도시의 희망을!
오늘과 내일의 비전을!
대한민국의 복지와 경제가 함께 자라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누리십시오.

경기도를 품어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편리하고 아늑한 공간. 따뜻한 사람들의 공동체.
어느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LH 경기지역본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경기지역본부

연료전지 발전소 논란 5개월... 현실적인 합의점 찾기 나설 때

정부·인천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으로 적극 추진 중
박 시장 “미룰 수 없다”…비대위 측은 천막농성도 불사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논란의 대상이 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부도 신재생에너지를 믿고 있는데다 사
도 공기업, 민간기업 등과 연료전지 발
전소를 확대하기로 계획이 짜여 있다.
반대를 위한 시위와 반목보다는 해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할 때
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6차 민관협 의체는 동구 송림동 8-849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8천920㎡)에 50억여 원을 들여 녹지공원, 극장, 편의시설 등을 만드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비용 지출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료전지는 한국수력원자력(60%), 삼천리(20%), 두산건설(20%), 인천종합에너지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팔 때 가중치 2를 받는다. 일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가 0.7~1.5이고, 지열·조력에너지가 1~2.5다. 연간 예상 전력 생산량을 곱하면 에너지 판매수익금은 228억9천513만 원 정도 된다. 이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가구별 전기요금 등 공공금을 내거나 지역발전기금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면 된다.

시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관심이
높다.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신인천연료전지(78MW), 인천국제공항

사(60MW), 인천연료전기(40MW), 인천환경공단(10MW), 인천항만공사(20MW) 등 다수 기업과 함께 연료전기 발전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산업단지별(각 20MW씩) 노는 땅에 총 300MW의 미래도심형 전력체계를 만든다.

박 시장도 지난 20일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춰 인건 전력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지만 반대는 분명하다.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중호 미대위 공동대표(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는 단식투쟁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완충 녹지를 검토했을 뿐 백지화 요구 의사에는 변화가 없다”며 “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가 유정복 전 시장이 추진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자 백 시장의 시정 운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해오름공원은 소래포구와 늪줄길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계획됐지만 아파트와 산책로로 단절된 모습이다. 사진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해오름공원을 잇는 소래포구어시장 일대 전경. <기호일보 DB>

	중기중앙회 인천 기업인 70명 유공 포상 ▶	7
	인하대, 인천시 의정을 위한 ICT 콘퍼런스 ▶	12
	인천제철알루미늄 신장장애인 일본 여행 지원 ▶	14

줄어드는 완충녹지 서식지 파괴 불렀다

기획

EAAFP 인천 10년,
생태관광 가능성을 엿본다

3 해오름공원의 비극

인천시 소래·논현지구의 해오름공원
은 주변 생태계와 단절된 도심 속의 섬이
다. 남쪽은 해안가에 접해 있고 북쪽은
거대 아파트 단지, 서쪽은 공업단지로 둘
려싸여 있다. 동쪽은 도로로 인해 소래습
지생태공원과 단절된 상태다. 소래대교,
영동고속도로, 수인선이 지나고 있다.

21일 시와 남동구에 따르면 현재 238만 3천283㎡ 규모의 소래·논현지구는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이 도시를 개발한 첫 사례다. 한화의 에코메트로 단지다. 남측 소래갯골을 따라 조성된 해오름공원은 남동인더스파크(남동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유입을 막는 완충지대다. 이곳에 데크와 아스팔트로 사람만의 산책로를 조성했다.

주거공간·골프연습장 세워지자
철새들 녹지 파편화로 피해 입어
시흥 배곧신도시로 둥지 옮겨가

한화는 2003년 초기 개발계획에서 남동산단과 택지 사이의 완충녹지로 89만2천561㎡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완충녹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시민들이 골프장 대신 충분한 완충녹지 조성을 요구하자 한화는 반대 여론을 수용해 골프장 면적의 일부를 공원부지로 변경했다. 대신 2004년 아파트용지를 기존 51만3천818㎡보다 12만2천876㎡ 늘어난 63만6천694㎡로 확대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설로 인해 완충녹지는 줄어든 셈이다. 기부채납해 일정 기간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임대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2만7천500㎡의 골프연습장도 건립됐다.

이때 늘어난 주거공간과 골프연습장으로 한아름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중앙

연못 등 녹지의 파편화가 발생했다. 물새들에게는 먹이활동 공간과 서식 여건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1년 송도갯벌을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보호종인 검은머리물떼새 1쌍이 번식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송도와 논현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서식했던 물새들이 옮겨간 것으로 판단했다. 갯골과 접한 논·현·소래지구~소래포구~소래해양생태공원을 잇는 그린네트워킹의 완성도가 떨어진 탓이다. 2011년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489만1천179㎡ 규모로 조성된 배곧신도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배곧신도시에는 생태와 인간이 공존한다. 해안에 수변공원을 만들고 단지 중앙에 공원을 조성했다. 배곧신도시~옥곡공원~오이도 선착장에 이르는 기존 해안도로에 완충녹지와 연계한 녹지체계도 구축했다. 도로와 항만, 주거지, 공장단지 등의 인위적인 간섭 및 주변 생태계와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였다. 소래깎과 송도깎을 찾는 물새새들에게 편한한 먹이터와 휴식지를 제공하려는 배려였다.

김유리 기자 kyr@khiolbo.co.kr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인천 건설업체 송도 워터프런트 참여 '물꼬'

인천 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건설공사<본보 4월 24일자 1면 보도>에 지역 업체 상당수가 참여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공구 하
단부에서 진행 중인 위터프런트 1-1공구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 후속 조치를
취한 결과, 서울 업체가 100%가 가져갔
던 하도급 비율을 서울 57%, 인천 43%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비용 242억 원 중 서울 업체는 138억 원을 가져가고, 인천 업체는 104억 원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원도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얻어낸 성과다.

다만, 하도급 금액의 60% 이상을 지역 업체에 권장하고 있는 시 조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인건경제청은 하도급 추가 확보를 위해 향후 미발주된 공정을 인천 업체로 제한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하도급 비율 변경에 따라 이미 계약된 토공 및 조경 분야의 하도급계약을 7월 중 서울 업체에서 인천 업체로 변경하

고, 8월에는 인천 업체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또 약 64억 원 규모의 미발주된 잔여 공사는 공사 진행사항을 감안해 9월 중 단계적으로 인천지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인건경제청과 인천시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상 지역 하도급 시공 참여 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게 하는 등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27일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일원에서는 송도위터프런트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린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옷감손상 걱정없는
그랑데만의
360개 맑은 봄바람**

360° 분포된 360개 에어홀의 풍부하고 고른 바람이
 옷감손상 걱정 없이 건조해 주니까, 자연의 건조처럼

자연의 좋은 건조
삼 성 건 조 기 그 랑 데



“ 그랑데의 양방향 도어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

* 옷감 손상 없는 건조기를 곁들 때는
 에어홀의 개수와 고른 분포를 꼭 확인하세요.

화력연료에 치우친 발전시설... 미래 에너지원 대체 시급

인천지역 에너지 공급량 석탄·석유 75.8%... 신재생에너지는 2.0%뿐
2030년까지 할당량 못 맞추면 과징금... 수소연료전지 도입 가치 충분

인천시가 LNG·석탄발전을 대체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품에 안기까지 그 여정이 험난하다.

동구 송림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계획은 주민들의 반대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수소를 축으로 하는 정부와 시의 에너지정책 행보와 엇나가는 모양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명시했다. 또 석탄발전소와 원전 감축을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4배 수준인 30~35%로 대폭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13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점을 생각하면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수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

5%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에너지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인천은 화석연료에너지 생산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낮다. 인천지역 에너지 공급량은 석탄 38.7%, 석유제품 37.1%, LNG 22.2%, 신재생에너지 2.0% (전국 평균 3.4%) 순이다. 게다가 2.0%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56.3%)와 폐기물(30.6%)에 쏠려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주재료인 나무 펠릿은 열량이 들쭉날쭉해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 폐기물 고형화 연료 역시 마찬가지다.

대기 질 저하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비해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수소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5.1%에 불과하다. 시가 정부 에너지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소

등 친환경적인 다른 에너지원의 보급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 역시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2030년까지 28%로 맞추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국전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입에만 2조 원을 발전자회사를 대신해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은 보완재로 가치가 충분하다. 인천 소재 광역발전시설은 석유·가스 등 기존 원료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전지시설의 발전 원료로 쓸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가동 이상대적으로 쉽다. 인천에는 영흥(발전 용량 5천80MW)·서인천(1천800MW)·신인천(1천800MW)·인천발전본부(1천460MW), 포스코에너지(3천412MW) 등 광역발전시설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 에너지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세부계획을 올해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까지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올해 내 세부계획을 수립해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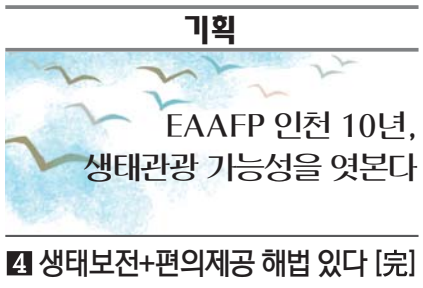
정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인천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물류센터 개소식이 22일 서구 가좌동 물류센터 앞에서 열려 참석 내빈과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환경 살리는 소래습지 정비가 답이다



매년 총 91종 1만2천966개체의 야생조류가 찾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사라져 가는 인천의 갯벌과 해양문화를 간직한 몇 개 남지 않은 내륙습지다. 송도갯벌 탐사르습지와 인천대공원 등 야생조류의 주요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최근소래습지생태공원은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한 축이다. 갯벌과 폐염전 등으로 소래 일대를 특화할 수 있다.

시와 남동구는 지난 21일 소래지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2022년까지 국·시비 총 419억 원

갯벌·폐염전 등 이색 볼거리 다채
거점 특색 살린 개발 청사진 필요
백 가지 계획보다 실천 필요한 때

의 사업비를 들여수도권 최대 규모의 습지공원(350만㎡)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인천대공원~소래습지생태공원~소래포구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철새의 서식지를 해칠 수 있는 LED 전광판과 모노레일 설치, 셔틀버스 운행계획은 접었다. 대신 거점별 특색을 살려 관광지와 핵심 생태보전지역을 구분하는 방향을 다시 모색한다.

논현동 소래포구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남문과 직접 연결됐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출발해 해오름공원을 거쳐 송도갯벌로 연결되는 중간 거점으로서연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 논현동 33 일대 레미콘 공장과 여구 적치장으로 차량들이 오간다. 외지 방문객 대부분은 각종 시설에 가려 공원과 포구가 서로 연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노인과 아이 동반 가족,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행로를 걷기에는 아슬아슬하다. 장기적으로는 일대터울을 사들여소래습지생태공원에 편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소래습지와 포구가 이어지면 해오름공원~송도갯벌~남동유수지도 연결할 수 있다.

자연상태 송도갯벌은 매립의 연속으로 서식지 교란이 우려된다. 남동산단 유수지도 좋지 않은 환경으로 저어새 생존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면 핵심 생태보전지역을 침해하지 않고도 시민 편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보행로가 확보되면 포구의 어촌문화 체험과 주변 갯벌 생태학습 등 다양한 연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실전이다. 남동산단 유수지는 근 10여 년 동안 준설과 철새 보호를 위한 환경 개선 용역을 7차례나 벌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잘 다듬어진 생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전국 최초 기부물품 물류센터 개소

인천시사회복지협 서구서 개소식
최대 60t 이상 분류·보관 가능해

전국 광역시 최초로 기부물품을 보관할 '푸드뱅크·마켓 물류센터'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2일 서구 가좌동에서 '인천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물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문을 연 푸드뱅크·마켓 물류센터는 총 668㎡ 규모로 물류공간과 냉동·냉장고,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갖췄다. 최대 120팔릿(60t) 이상 기부물품을 분류해 보관할 수 있는 규모다.

협의회는 물류센터를 통해 소외계층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물품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나눔행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물류센터가 나눔과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도 담당한다.

행사는 물류센터 추진 경과보고, 기부

기업 감사패 수여, 인천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 홍보대사 위촉(배우 윤희석),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푸드팩' 나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운성 회장은 "푸드뱅크·마켓은 식품 등 사고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험 가입으로 보다 안전하다"며 "물류센터 개소로 기부자가 후원하는 식품과 생활용품이 더 안전하게 꼭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

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뱅크·마켓은 기업과 개인 기부자에게서 후원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인천은 1998년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곳, 기초푸드뱅크 12곳, 푸드마켓 14곳 등을 운영 중이다. 2013년부터는 웅진군과 함께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해 푸드뱅크가 없는 도서지역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소외계층에게 물품을 후원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 기업은 인천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032-891-13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